

한글  
한글

# 일본 매스미디어의 혐(嫌)중국과 중국의 '민주'

마루카와 데쓰시



最後の審判を  
生き延びて  
劉曉波文集  
劉曉波

## 1. 머리말

일본사회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대지진과 다음 날 일어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그동안 국책으로 추진해 왔던 원자력발전에서의 '안전신화'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안전신화'의 붕괴가 원발(原發)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과학 기술 전반에 걸친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민주'와 함께 전후 일본 아이덴티티의 커다란 부분을 점해 왔던 '기술입국'이라는 자기인식은 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다만 그러한 전후 일본의 아이덴티티는 1990년대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종의 초조와 불안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 온 중국과 관련된 대외인식에 있어서, 일본 매스미디어는 종종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애써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가장 광범하게 보이는 패턴은 '자유가 없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중국이라는 식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 과학기술의 낮은 수준을 강조하는 식으로 비교우위에 호소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2011년 7월 23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일어난 고속철도 사고에 관한 일본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가장 적합한 사례일 것이다. 사고 다음 날부터 일본 매스미디어는 중국 당국의 사고 은폐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의혹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크고 작은 여러 미디어

\* **지은이** |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 1963년생. 2002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2007년 박사학위(학술) 취득. 현재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동 대학원 교양디자인연구과의 평화·환경과정 겸임. 전공은 타이완문학 및 동아시아문화론. 저서로 『리-조나리즘』(東京:岩波書店, 2002), 『冷戦文化論』(東京:双風舎, 2005)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각각 『리저널리즘』(백지운·윤여일 옮김, 그린비, 2008), 『냉전문화론』(장세진 옮김, 너머북스, 2010)으로 번역·출판되었다. 최근 『다케우치 요시미 아시아와의 만남』(『竹内好 アジアとの出会い』, 東京:河出書房新社, 2010), 『타이완 내셔널리즘』(『台湾ナショナリズム』, 東京:講談社, 2010), 『루쉰과 마오쩌둥』(『魯迅と毛沢東』, 東京:以文社, 2010) 등을 출간하였다.

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현장 바로 옆에 굴을 파고 사고차량을 매장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신칸센이라면 절대 저런 꼴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완전하게는 입증하기 어려운 코멘트를 저명한 기술전문가에게 말하게 하고, 그 코멘트를 자신들의 보도 중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선전하는 것이다. 원발문제에 한정된 것이라고는 해도 이른바 일본의 ‘안전신화’가 다소나마 의문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일본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보도에 대해 적어도 내 주변의 지인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주로 경제 부문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경제적 대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려는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매스미디어)은 일이 생길 때마다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무리하게 연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른바 냉전사고(반공사고)에 기초한, 중국사회에 대해 ‘자유민주’가 결여되었다고 침을 튀기며 지적하는 식의 비교우위 강조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내부에 독자적인 ‘민주’에 대한 사고법이 존재한다는 것, 독특한 ‘민주’에 관한 견해의 분기(分岐)와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하에서는 초보적으로나마 중국 독자의 ‘민주’에 대한 지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민주’ 개념은 다른 신흥국이나 제3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쯤은 서양으로부터 외래사상이 이식되면서 시작된 것이며, 한편으로 근대 중국의 진전 가운데 나타난 역사의 특이한 흐름과 교차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민주’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셔널리즘과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와 세트가 된 내셔널리즘이란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민족의 자유’를 의미하고, 밖으로부터 보자면 ‘주권의 옹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 및 그 주변부(타이완, 홍콩 및 미국 유학생 등)에서 시작되어 표면적으로는 ‘주권옹호’를 위한 내셔널리즘의 발로라고 여겨지는 운동이, 그 안에 ‘민주’에 대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즉 일본에서

는 ‘셴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어로는 ‘다오위타이’(钓鱼台, 이하 조어대)라고 부르는 지역과 관련된 이른바 ‘보위조어대’(保衛钓鱼台)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루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바로 이 ‘보위조어대’운동에는 세 번의 피크가 있었는데, 이하에서 각각의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보위조어대’운동과 중국(타이완)의 ‘민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떠올려 보도록 하자.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셴카쿠제도 부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정선(停船)을 권고했으나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는 도주 과정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여러 차례 충돌했기 때문에, 중국인 선장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양국의 ‘영토문제’로 비화되어 갔다. 그 후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 특히 지방 청년들이 중심이 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일본 매스미디어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세대교체 등과 관련된 권력 투쟁이 반영된 것이라거나, 또는 중국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격차사회에 대한 불만의 배출이라는 식의 단순한 평가를 내렸다.

당시 일본 매스미디어의 분석은 종래 중국을 다루던 방식에서 별반 나아지지는 않은 것이었다. 그러한 수법은 과거 전전(戰前)에 이른바 ‘지나통’(支那通)이 중국 정세를 논하던 회법과도 유사한 것이며, 또한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을 분석해서 보여 주는 냉전기 ‘신지나통’(China Watcher)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공통점이라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역사적·내재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는 무기력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력함은 자신의 발화(發話)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했기 때문으로, 중국 내부의 반응은 일본 측의 반응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몰주체성 그 자체인 셈이었다. 현대 중국 ‘민주’운동의 효시인 5·4운동(1919)이 21개조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자주 기억에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도 말이다.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보위조어대’운동은 이번

(2010)을 포함하여 1970년대부터 모두 세 번 일어났다. 그런데 그 세 번 모두가 중국(이 경우는 타이완이나 홍콩도 포함)에서의 '민주'의 양상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한 최초의 표현은 1970~71년에 걸쳐 타이완(중화민국)에서 발발했던 '보위조어대'운동이었는데, 이 사건은 일본에서는 이미(또는 줄곧) 기억에서 흐릿해진 일이기에 역사적 경위부터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기에 걸쳐 타이완(중화민국)은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변화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단적으로는 1971년부터 미국이 인민공화국에 접근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오키나와 반환을 앞두고 반환의 내용물이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1968년, 국제연합 아시아개발위원회가 센카쿠제도(조어대)에 해저유전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 1970년 9월, 일본정부는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고 선언했고, 미국 국무원도 마치 이를 추인이라도 하듯 센카쿠제도가 (일본으로 반환이 예정된) 오키나와에 소속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화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충격적인 사태였지만, 당시의 중화민국 외교부는 조어대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외교 루트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항의할 뿐 적극적인 행동에는 거의 나서지 못했다.<sup>1)</sup> 이후로도 미국은 센카쿠제도(조어대)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은 채, '시정권'(施政權)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식의 애매한 화법으로만 일관했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타이완 북동부宜蘭(宜蘭)현 어민들이 센카쿠제도 부근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조업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선이 저지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외적 충격을 계기로 사건 다음 해인 1971년 타이완 및 미국 주재 유학생에 의해 '보위조어대'운동이 발발한다.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국민당계(우파) 운동과 인민공화국계임을 자처하는 좌파의 운동이

1) 한편으로 대륙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일 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외교 루트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2) 이 의미에 관해서는 지금도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센카쿠제도(조어대)에 관해, 미국은 일본의 영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미안보조약의 문언을 볼 때 그 '실행지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진행되다가 타이완 본토에 있는 타이완대학으로 확산되었다. 타이완대학 철학계 대학원생이었던 왕샤오보(王曉波)가 『중화잡지』(中華雜誌)에 「보위조어대!」라는 글을 발표,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弱腰外交)를 맹렬히 비판했다. '5·4운동선언'(五·四運動宣言)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보이는 이 호소문은 그야말로 이상주의적 청년의 기개가 정부를 직격하는 듯한 역사적인 글이 되었다.

1971년 4월 13일, 백색테러가 지배하던 타이완대학에서 당국의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제작된 현수막이 걸리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대학 정문에 걸린 현수막에는, “중국의 토지는 설령 정복되는 한이 있어도 한 치도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 “중국의 백성은 설령 죽더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sup>3)</sup> 이어서 14일까지 타이완대학 화교계 유학생들이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을 향해 가두 데모를 감행하였고, 마치 그에 의해 촉발된 듯 20일에는 오랜 사상 탄압을 돌파하고 드디어 타이완 학생이 주체가 된 ‘타이완대학 보위조어대위원회’가 발족했다. 이후 이 ‘보위조어대’운동은 타이완대학·사범대학을 비롯한 타이완 전국의 대학과 학교로 들불처럼 번져 갔다.

그 후 ‘보위조어대’운동 자체는 냉각기에 들어가지만, 이 운동의 역량은 이후 각 대학 학생회의 직책을 두고 국민당계 후보자와 경쟁하는 양상의 대학 민주화 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1차 ‘보위조어대’운동은 영토 내셔널리즘에서 비롯되어 중화민국(타이완)의 냉전독재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운동이자,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후퇴하여 정권을 세운 이후 일어난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기록되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 ‘보위조어대’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6년 홍콩의 민주과, 내셔널리스트, 그리고 여기에 합류한 타이완그룹을 중핵으로 하는 애국주의 단체가 센카쿠제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제2차 ‘보위조어대’운동이라고 한다.<sup>4)</sup> 이들 사건의 중요 참

3) 중국어로는 ‘中国土地可以征服不可以断送’과 ‘中国人民可以杀戮不可以低頭’이 된다.

4) 이에 대하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등 일본의 보수정치거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민간단체는 일본 쪽에서 센카쿠제도로 진입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여자들 가운데 여러 단체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륙 중국의 정치체제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중화민국’ 반공애국연맹<sup>5)</sup>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보적으로나마 제2차 ‘보위조어대’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요인을 소개한다면, 아무래도 이듬해인 199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홍콩반환’을 하나의 지표로 들 수 있다. 인터넷상에 나와 있던 여러 운동체의 언설로 볼 때, ‘홍콩반환’에 임박하여 조금이라도 더 대륙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려 했던 운동의 동기가 엿보이는 것이다. 대륙정부가 주도하던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내용에 관해 홍콩 측의 주체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홍콩 내부에서의 ‘민주’를 더욱 강화하고, 그러한 주체성을 대륙정부에 어필하려는 행동이었다. 나아가 총체적으로는 중국 전체의 ‘민주’ 열기 고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타이완에서 있었던 제1차 ‘보위조어대’운동의 경우와 비교할 때, 물론 시대나 장(場)의 역학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번 모두 중국의 ‘민주’를 추구하는 흐름에 편승한 운동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세번째 ‘보위조어대’운동이 앞서 소개했던 가장 최근의 운동이다. 이번(2010) 경우도 영토문제가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 대륙의 지방 도시 저소득층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데모가 일어났다. 이 데모를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전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2005년의 ‘반일데모’와 비교해 보면, 운동의 현장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 아닌 지방 도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백하게 이 운동은 슬로건의 선택이나 조직 방법에서 1996년 홍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보위조어대’애국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sup>6)</sup> 같은 맥락에서 대륙 중국과 홍콩 운동가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利害)와 구체적 제휴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이 운동도 영토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비롯된 다른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토문제는 구실에 불과했다는

5) 이 ‘반공애국연맹’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 보면, 현 타이완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등이 미국 유학 중 좌파의 중국내셔널리즘 단체에 대항하여 일으킨 그룹이 발전한 것이다.

6) 데모대의 현수막 가운데는 예컨대 타이완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은 슬로건도 있었다.

해석도 가능하다. 그들의 주장 내용에 자신들의 '생존권' 주장이 보다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모대의 현수막 문자 가운데, 예를 들면 '살(住む) 권리'가 적혀 있는 것도 그 방증이 된다. 5년 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일어난 2005년 반일데모의 경우는 운동의 목적의식 가운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 또한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의 경제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오히려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보위조어대' 데모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았다.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 공산당에 의한 '국당체제'(國當體制, 당이 이익집단화하여 부패를 낳는 것)를 강하게 비판했고, 그에 비례하여 자신들의 생활(특히 기회균등 보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생존권' 요구인 것이다. 이는 실로 동시기에 광범하게 나타나던 중국 국내의 권리요구운동과 연동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던 광둥성(廣東省) 둥관(東莞)의 공장지대에서, 지방에서 온 청년 노동자에 의한 (어용조합이 아닌 곳으로부터) 풀뿌리 노동운동이 빈발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러한 젊은층의 행동 패턴은 오히려 1989년 제2차 천안문사건에서 보였던 (학생들이 아닌) 베이징 노동자들의 의식과 닮아 있다. 당시 '개혁개방'이 도시정책에까지 적용되어 국영기업이 민영화(사유화)되고 총체적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노동자들은 다수의 공산당 고급 간부와 그 친척들이 권리(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된 재산)를 독점한 것에 반발했었다. 즉 그들의 요구는 '생존권'을 내세운 '민주'의 요구였던 것이다.<sup>8)</sup> 당시 학생단체가 주로 '자유권'의 획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7) 그러나 일본 매스미디어에서는 이 당시 젊은이들의 '생존권' 요구에 관한 부분의 분석이 거의 없이,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을 반영한 것이라는 식의 종래와 같은 분석이 두드러졌다.

8) 이 제2차 천안문사건에 관한 총괄로서는, 왕후이(汪暉)의 『사상공간으로서의 현대중국』(村田雄二郎·小野寺史郎·砂山幸雄 訳, 『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国』, 東京: 岩波書店, 2006) 중의 논문 「1989년 사회운동과 중국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一九八九年の社会運動と中国の"新自由主義"の歴史的起源)을 참조할 것.



흥미롭게도 2010년 지방도시 젊은이들의 반란 동기는, 제2차 천안문사건 당시 도시노동자들의 행동원리와 구조적으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세 번에 걸친 ‘보위조어대’운동이 실로 중국 내부에서 ‘민주’의 태동을 보여 주는 것이었음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부분의 논증은 상당 정도 생략할 수밖에 없으며, 세 운동의 차이를 자세히 논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도 아니다. 다만 첫째, 중국 내부에서의 ‘민주’의 태동은 역사적으로 ‘주권의 방위’(혹은 내재적으로는 ‘민족의 자유’)와 연동해서 발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한 주장에는 농도 짙게 ‘생존권’(‘자유권’이 아니라)에 대한 회구가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무시한다면 역시나 중국현대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 서양과 같은 형태의 ‘선거’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의 ‘민주’는 대중의 시위행동(테모)을 통해 표현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9)</sup>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종종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공산당 내부까지도 포함한 사회적 논쟁의 폭에 관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회주의에서의 가치 및 규율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와 같은 (가치규율논쟁이라 불리는) 문제제기가 이미 1950년대에 공산당 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개혁개방’ 전야인 1975년 전후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에 관련된 성찰에서, 부르주아지 법권(노동량에 따른 보수의 비례 배분이라는 사고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노동가치설과 상품경제에 관련된 논쟁이 장춘차오(張春橋) 그룹과 덩샤오핑(鄧小平) 그룹 사이에서도 발생했던 바 있다.<sup>10)</sup> 어쨌거나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없었다면 ‘개혁개방’ 이후의 (특히 농산물에 관련된) 상품교환 영역의 확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중국 학자 왕후이(汪暉)가 말하는 이른바 ‘탈정치의 정치’라는 콘셉트는 현대 중국에 대한 매우 유효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왕후

9) 또 이 대중시위활동과 더불어 역시 정부나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정치적 결정의 커다란 요소라는 견해도 반드시 틀린 분석이라 할 수는 없다.

10) 潘維·瑪雅主編, 『人民共和國六十年与中国模式』, 北京: 三聯書店, 2010, 111~115쪽.

이는 근래 중국에서 논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 폐쇄(閉塞)이라고 보고, 정치공간의 활성화에 의해 현재 '국당체제'가 가져온 질곡을 대치시키려는 언설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은 중국 국가자본의 세계화라는 필연성을 가지지만, 제2차 천안문사건 탄압에 의해 정치적 논의의 공간이 봉쇄되고 그 결과 '탈정치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었다. 90년대 중공 및 중국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안정단결'은 사실 은연중에 논쟁의 금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현재 중국에서의 '민주'의 문제란, 그야말로 왕후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탈정치의 정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문제 설정 위에 있는 듯하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민주'의 태동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중의 시위행동과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그리고 사회적 논쟁(정부 차원, 지식인 차원, 대중 차원)의 진전 등이 서로 얽히면서 나타나게 될 국정 차원에서의 '민주'의 전개를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 3. 류샤오보(劉曉波)문제의 근원으로서의 90년대 중국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친 중국 내외의 언론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류샤오보가 제기한 「08헌장」(〇八憲章)<sup>11)</sup>의 반향이 중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것이었는지, 또 그 후 그의 체포와 노벨평화상 수상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체포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흐름 가운데 (서양이나 일본에서) 류샤오보라는 이름은 중국 '민주'의 대명사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점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지금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의 문장을 정리한 저작 『최후의 심판을 견뎌 내고』(最後の審判を生き延びて)가 나와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사상 경향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전에도 그의 프로필이나 행동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있기는 하지만, 사상의 내용 자체는 논의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과연 중국의 '민주'를 위해 유익한 것이었는지, 이제 명확

11) 2008년 12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작가 류샤오보 등 303명이 연명으로 인터넷에 발표한 선언문. 중국의 정치·사회 체제에 관해,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종결, 삼권분립·민주화추진·인권상황 개선 등을 요구했다. - 울긴이

히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sup>12)</sup> 그 개인의 사상을 하나하나 음미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그의 사상이 반사(反射)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민주'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상황에 깊숙이 측정기구를 삽입해 본다는 식의 방법적인 태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1989년 천안문사건에 관련된 평가와 동시에, 오히려 그 후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sup>13)</sup> 이후까지의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1989년 천안문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했던 탄압 그 자체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정부를) 판단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남순강화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오늘날의 격차사회를 초래한 '돌파구'로 간주되는 사건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2차 개혁개방에서 중국은 그 노동력과 시장을 세계 자본주의 네트워크에 대담하게 '문화개방'한 셈이었다. 실로 이 정치 퍼포먼스에 의해 덩샤오핑은 정부 내부에서 공유제(公有制)를 굳게 지키려는 그룹의 견제를 물리치고 서구 측(일본도 포함) 자본가의 욕망에 부응하여 해외투자자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세제(稅制)나 특구를 설정했으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 연해도시부에 격발적(激發的)이라고 할 정도의 산업개발을 강행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류샤오보 자신은 남순강화에 관해 이렇다 할 독자적인 관찰이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90년대 전반)에 관련하여 그가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지적해 둘 것이 있다.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라는 방식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1989~91년을 통해 이뤄진 소련의 해체(그리고 러시아 경제

12) 『最後の審判を生き延びて』(劉曉波 著, 丸川哲史・鈴木將久・及川淳子 訳, 東京: 岩波書店, 2011)에 실린 「解説」(丸川哲史, 鈴木將久)을 참조할 것.

13) 덩샤오핑이 1992년 1월 18일~2월 21일에 걸쳐 우한(武漢), 상하이(上海) 등을 시찰한 후, 개혁 가속을 천명한 중요 담화. 같은 해 10월,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개혁의 목표로 선정되어, 생산수단의 공유제·완전고용의 실현 등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과 결별했다.'— 옮긴이

의 하강)와 그 직후에 일어난 제1차 걸프전쟁이다. 미국을 포함 서양 국가들과의 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수파의 견제를 누르고 1989년에 한번 닫았던 '문호'를 다시 여는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장쩌민(江澤民) 정권 하의 주요한 슬로건은 앞에 제시했던 '안정단결'(논의를 허락하지 않는다)이었으며, 덩샤오핑의 직접 지시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세를 낮게 하여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었다.<sup>14)</sup> 즉 이 남순강화는 소련의 해체와 제1차 걸프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중국의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정치체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경제분야의 '문호개방'에 적극 응하는 것으로 내외의 난국을 타개한다는 '탈정치의 정치' 결단이었다.

바로 이를 기점으로 하여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좌파 vs 자유주의파라는 식의 진영의 구분이 90년대 후반 이래 중국 이데올로기의 분기(分岐)를 표상하는 구도로 정착되어 갔다. 아주 단순화하자면 신좌파는 이 남순강화 이후 격차사회의 출현에 경종을 울리고, 공유제의 재평가와 함께 서양 측의 가치관을 기적으로 한 정치개혁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대표해 갔다. 다른 한 편인 자유주의파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시민사회 형성이 진전됨에 따라 서양형을 모델로 하는 정치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세우면서, 중공(中共) 통치의 불합리성을 규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sup>15)</sup>

류샤오보는 명백하게 자유주의파라고 불리는 사상경향을 대표하는데, 여기에서 자유주의라는 명칭 그 자체의 역사적 콘텍스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생긴다. 다소 언어유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자유주의에 '신'(新)이 붙는가 여부는 그 나름으로 중요하다. 이하는 류샤오보의 대표적 평론으로, 중국 민주개혁의 방도를 논한 「사회를 바꾸어 정권을 바꾼다」(社會を變えて政權を變える)의 한 구절이다.

14) 「대두하는 중국의 대외관계」(『台頭中国の対外関係』, 中居良文 編著, 東京: 御茶の水書房, 2009)에 실린 나카이(中居)의 논문「대두하는 중국과 미국 — 경제발전을 위한 레토릭」(『台頭中国とアメリカ—經濟発展のためのレトリック』)을 참조. 이 논문에서 그는 제1차 걸프전쟁이 중국, 특히 인민해방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실제로 타이완에 대한 '무력해방'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협의 표현으로서 '미사일' 개발이 중요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5) 『ポスト(東アジア)』(孫歌·陳光興·白永瑞 編著, 東京: 作品社, 2006)에 실린 스즈키 마사히사(鈴木將久)의 논문(『中國革命とアジア論』)에 의거하여 참조.

달리 말하자면 비폭력반항에 의한 장기적 실천이든 또 자유제도가 역사를 끝낸다는 예언이든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도덕감을 갖춘 정신적 존재이며 도덕감의 핵심이란 일개인에 관련된 존엄이다. 존엄을 중시하는 것은 정의감이 자연스레 넘쳐 나기 때문이다. 제도나 국가가 모두에게 삶의 존엄을 부여할 때, 그 제도나 국가를 비로소 사람들이 동일화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치의 미덕에 부여한 이해와 같다. 덕성이 있는 선정(善政)은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확립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가지 형태의 반항을 일으키고 양식(良識)에 따라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반항 형식의 하나가 된다. 자유제도가 왜 독재제도를 대신하는가, 냉전의 마지막이 왜 역사의 종언으로 간주되는가. 그것은 자유제도에 의해 인간의 존엄이 인지되고 존중되기 때문이며, 독재에 의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승인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이다.<sup>16)</sup>

앞에 언급한 중국 내부의 진영(신좌파 vs 자유주의)에서, 특히 그 대립 내부의 잠재적 테마에서 '신'자유주의를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별하는가라는 것도 실로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자유주의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시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즉 자유주의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유효한 비판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좌파라고 불리는 논객·학자들(특히 경제분야)은 2003년 장쩌민 정권으로부터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으로 전환될 때 상당수가 이른바 싱크탱크로 흡수되었다.

논의의 초점을 류샤오보의 사상에 반사되는 중국 내부 이데올로기 상황에 맞춰 본다면 중요한 것은 역시 포스트 냉전시대 세계지배에 대한 태도이다. 즉 앞에 제시한 인용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 류샤오보는 소련·동구권 해체 후 네오콘의 독트린이 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론을 답습하고 그 입장에서 중국개혁을 논하려고 했다. 그 의미는 역시나 크다. 그러나 거둬 이야기하는 것처럼,

16) 劉曉波, 『社会を変えて政権を変える』, 『觀察』2006. 2. 26(劉曉波, 『最後の審判を生き延びて』에 실림).

이것은 류샤오보 개인의 사상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이데올로기 상황에 반영된 과제이다. 현재 중국 국내에는 '역사의 종언'론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으며, 그와 같은 언론 자체도 실제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류샤오보가 자신의 문장에서 제1차 걸프전쟁도 아프가니스탄전쟁도 또 제2차 걸프전쟁도 비판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종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개혁을 논하는 것이 중국에서 언론의 자장(磁場)으로서 유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른바 '역사의 종언'론에서 중국 현재제는 일방적으로 서양 측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흡수되거나 타도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논의로 축소되어 버린다. 따라서 류샤오보 등의 논의가 중국 국내에서 소수파에 머물고 있는 것도, 당국에 의한 언론 봉쇄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이미 신자유주의 국가이기도 하다.<sup>17)</sup>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역사의 종언'론에 이끌려 전개되어 온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전쟁정치(제1차 걸프전쟁으로부터 이라크전쟁이라고 불리는 제2차 걸프전쟁까지)의 전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민주'개혁에서의 분열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세계 구조의 분열을 반영하는 분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웃지간이기도 한 일본에서 중국의 '민주'를 논하려 한다면 최소한 세계구조의 심각한 알력과 중국 내부개혁의 곤란함이 사상문제와 연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류샤오보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던 「08현장」의 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서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정치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up>18)</sup>

17) 중국이 이미 신자유주의국가라는 의견은 David Harvey, "Neoliber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한울, 2009]를 참조.

18) 예를 들면 저명한 칭화(淸華)대학의 학자 친후이(秦暉)는 『아주주간』(『亞洲週刊』, 2009. 3.)에 발표한 「중국은 더욱 민주 의 논의와 새로운 계몽을 필요로 한다」(中國更需要民主辯論與重新啟蒙)에서, 「08현장」은 이전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등이 중심이 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체코의 「77현장」을 많이 모방한 것이지만, 당시 체코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중국에서 그것은 수법이 유효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친후이는 현재의 중국에서는 '서명'을 요구하는 식의 운동방식보다는, 가능하다면 사상전투를 전개하는 편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4. 중국의 '민주'와 일본

앞으로 중국의 '민주'가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심 있는 일본인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시금석은 중국의 '민주'가 어떤 질(質)을 가지고 가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중국인 내부의 시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가라는 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 받은 측이 중국 장래의 '민주' 주역이 되리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민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점이라. 그리고 그 언동에 관한 평가는 반드시 주관적 선의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류샤오보에 대해 일본 지식인 중에는 그의 언설이 실제 어떻게 중국사회에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찰없이 그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것,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 등을 가지고 중국 '민주'의 구세주로 치켜세우는 경향이 있다. 맹목적으로 이에 끌려가는 매스미디어의 논조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일본의 현상에 관해 일본의 대표적 논객으로 데리다(J. Derrida) 연구자이기도 한 우카이 사토시(鵜飼哲)는 '역사의 종언'론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냉전의 승리자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개변(改変)한 것이 바로 '역사의 종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는 류샤오보의 발언이나 기본적 사고방식 등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체계는 매우 신경이 쓰이네요. …… 이제부터 중요한 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어느 한 개념으로 당시까지의 역사를 총괄할 수 있고, 또 그 개념의 방식에 준하여 이후의 모든 일이 해결되어 버릴 것이라는 식의 이해는 그야말로 세계적 사상으로서 오�히려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류샤오보 씨가 자신의 활동이나 지금의 중국 정치를 분석할 때, 역사적 분석을 위한 역학점(力学点)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가관이 이러한 '역사의 종언'류와 비슷한 것이었다면, 역시나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sup>19)</sup>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류샤오보를 중국 '민주'의 상징으로 치켜세워 중국정부 및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비판하는 논조는, 이른바 중국에 대한 '양심'의 발로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중국적 근대의 진전에 호의적이었던 일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침략의 일익을 담당할 적도 아주 많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훗날 아시아주의자라고도 불리는 경향성을 갖고 있던 정치가, 민간인, 지식인들의 '개입'이 대표적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민권활동가로서 신해혁명에 깊이 간여했던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는 신해혁명이 한창이던 시기, 강 건너 불(혁명)이 일본의 국체(国体)를 위협하게 한다며 그에 반대하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철저히 비판했다. 하지만 만주사변 때는 거의 180도로 돌변하여, '사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측으로 변신했다. 그 전환의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타이완 출신 학자로서 일찍부터 왕성하게 발언하던 다이귀후이(戴國輝)는, 나카노(일본인)의 민권운동에 대한 이상이 좌절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민주'란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여러 개인의 끝없는 노력의 축적 가운데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요즘도 중국의 '민주'를 서양형 모델(제도)로부터의 거리로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무력한 논평은, 뒤집어 보면 일본에서의 '민주'의 과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패턴으로, 다이귀후이의 표현처럼 자국의 민권운동에 실패했던 나카노 세이고의 모습과 다름없다. 중국에서의 '민주'의 진전과 관련해 예를 들자면, 이른바 '인권'상황 혹은 '언론'상황이 열악(不備)하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에게 중국(정부)을 비판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도 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역시 시대는 분명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전전의 중국이 아니다. 일찌기 아시아주의자들이 중국에 대해 했던 '개입'은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반복해 말하자면, 일본 자신의 '민주'에 실천적 관심을 갖지 않

19) 鶴飼哲・丸川哲史, 「外の味方が何なのか—中国のイデオロギー状況が現在どう動いているか、世界状況とどのような関係性を持っているか」, 『図書新聞』3009호, 2011년 4월 9일자.



는 인간에게는 역시 중국의 '민주'에 대해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주'에 관심을 갖는 것, 이웃의 현실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개입'과 결정적으로 다른 패턴에서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떠한지,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정도의 문제설정 자체는 [일본인에게도] 허락될지 모르겠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2011년 봄부터 중동지역에서 일련의 정권 교체극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관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활동이 중국에 파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젊은층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자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나 토양이 다르다면,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을 범례로 삼아 중국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졸속이 되기 쉽다. 중국의 '민주'가 어떻게 진전하는가에 관한 관심을 새로이 연마하기 위해서라도 유사점만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과 비교하여 중동지역에서는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등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구미형 '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하여 국정선거도 나름대로 실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구미형 '민주'제도가 있으면서도 결코 민중이 바라는 정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 국내의 움직임은 슬로전상으로는 '일당 전정(專政)의 끝'(중국에서는 '독재'가 아니라 '전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다)을 주장하지만, 어떤 형태를 수반한 '민주'를 지향하는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생존권' 관련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최근 나타나는 중국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2000년대부터 젊은층(특히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이 증가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취직을 하기 위한 '안전기원' 부적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당적이 반드시 취직을 보장할 수는 없는 없게 되었다. 실제 화이트칼라층

으로서 취직할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금을 거두기 쉬운 화이트칼라층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 온 중앙정부의 교육·노동정책의 파탄을 보여 준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친 대중 시위행동에서 참가자의 연령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대개 5세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으로 볼 때, 중국 젊은이들이 가진 불만은 기회불균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과 깊이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의의제기로서, 고급관료와 자본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부패, 즉 불공정한 배분에 대한 분노가 '생존권'의 회구로 응축되고 다시 그것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즉 다름아닌 '국당체제'가 바로 사회적 배분의 불공정을 낳는 근원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상당한 정도로 들어맞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중국에서의 '민주'의 전통은 역시나 그 근원을 찾는다면 '생존권'과 그를 보장하는 분배구조의 재설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찌기 중국공산당·중앙정부는 몇 번인가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시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은 도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국영기업을 노동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후 제2차 천안문사건으로 이어졌던 경험<sup>20)</sup>이 있다. 중국공산당·중앙정부는 젊은층에게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또 그 이상으로 공정한 분배시스템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장래 일어날 대규모 '민주' 개혁의 중심 골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측을 하나 해본다면, 그러한 대규모 '민주' 개혁이 일어난 후 중국이 서양(혹은 일본)의 가치관에 접근한 국가가 되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20) 왕후이(汪暉)의 「一九八九年의 사회운동과 중국의 "新自由主義"의 歴史的起源」를 참조.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은경(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이 번역하였다.